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739호 2023. 12. 26.(화)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5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5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2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8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90

규

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9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107

훈

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마을박물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121

예

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126

회 람								
--------	--	--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8조, 제11조, 제18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6장(제35조 및 제3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청소년시설의 운영

제35조(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구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3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시설을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의 참여 보장 및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8조, 제11조, 제18조 및 제27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설치)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법 제5조의2----- ----- ----- ----- -----.
제25조(결격사유)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 ----- -----.
<신 설>	제6장 청소년시설의 운영
<신 설>	제35조(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다.

<p><신 설></p>	<p>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구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p> <p>제3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시설을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	--

◆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규정하여 우리 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에 상위법 근거 조문 추가 (제1조)
- 나.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제35조~제36조)
- 다. 인용 제명, 약칭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제1조, 제2조, 제3조, 제2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나. 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
- 다. 세입·세출 (제4조)
- 라. 준용 (제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한다.

제6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공무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 ----- ----- ----- -----.
1. 육아·질병· <u>가사휴직</u> 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1. ----- <u>가족돌봄휴직</u>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u>소속 공무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u>
10.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본인 등에 대한 장제비 지원 등 장례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제3조제2항제1호)

- 가사휴직 ⇒ 가족돌봄휴직

나. 후생복지사업 중 장례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제6조제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추진한 경우”를 “추진한 경우 또는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경우”로 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4.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및 공무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u>2년</u>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 ----- ----- <u>5년</u> ----- ----- ----- -----.
<신 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휴가) ① ~ ② (생략)	제13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 ----- ----- -----.
1. <u>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u> :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 <u>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u> :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 <u>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u> :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 <u>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u> :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 <u>30년 이상 재직 공무원</u> :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	3. <u>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u> :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p>④ (생 략)</p> <p>⑤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u>추진한</u>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4.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추진한</u> <u>경우 또는 남녀고용평등 실현과</u> <u>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경우</u> ----- ----- -----.</p>
--	---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정비 (제11조, 별표 3)

나.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제 근거 신설 (제12조의2)

다. 특별휴가 규정 정비 (제13조, 별표 4)

-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 특별휴가 부여 근거 추가
-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자료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연합협의회(광역시·도별)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제2호 중 “기관장”을 “설립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협회의의 활동) 협회의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2. 협회 대표자와 협의회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2. ----- ----- ----- ----- <u>(자료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삭제>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 (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신 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⑥ (생 략)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4. (생 략)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① (생 략)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규정) -----

-----.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연합
협의회(광역시·도별)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현행과 같음)

2. ---- 설립기관의 장-----

3. 4. (현행과 같음)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③ (생략)</p> <p>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u>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협의회의 활동) <u>협의회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협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u> <u>2. 협회 대표자와 협회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u>
--	--

◆ 제안이유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권익 증진 및 직장협회의 협상력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인용 제명 정비 (제3조제1항)
- 나. 협의회규정에 광역시·도별 연합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조문 신설 (제5조)
- 다.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협의회 활동 범위 구체화 (제13조)
- 라. 약칭 용어 정비 (제10조, 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500원”을 각각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 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의 100분의 70을 <u>2023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 면허세 감면) -----	

		-----	<u>2026년 12월 31일</u> -----.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u>2026년 12월 31일</u> -----.
제6조의2(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6조의2(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 ----- <u>2026년 12월 31일</u> ----- -----.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 ----- -----.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500원</u>	1. ----- ----- <u>800원</u>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500원</u>	2. ----- ----- <u>800원</u>
3.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1,000원</u>	3. ----- ----- <u>1,600원</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의 감면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한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법령에 따른 최고 금액으로 상향시켜 고지서 미발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의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 (제3조, 제4조, 제6조의2)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인상 (제7조)

-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 고지서 1장당 500원 ⇒ 800원(증 300원)
- 전자송달 납부만 신청: 고지서 1장당 500원 ⇒ 800원(증 300원)
-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납부 모두 신청: 고지서 1장당 1,000원 ⇒ 1,600원(증 600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세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5조(이용료등의 납부·감면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면제 2. 다자녀가정(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u>세자녀</u> 이상 되는 가정을 말한다)의 장애인: 100분의 50 감경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 ④ (생략)	제5조(이용료등의 납부·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 2. ----- ----- <u>두 자녀</u> ----- ----- ----- 3. ----- ----- 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3→2자녀) 추진에 따른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2023. 8. 16.일부개정, 2023. 10. 31.시행]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다자녀가정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용료등의 감면 대상 중 다자녀가정 규정 정비 (제5조제3항제2호)
- 18세 이하 자녀 포함 세 자녀 이상 가정 ⇒ 18세 이하 자녀 포함 두 자녀 이상 가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4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제6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u>6세 미만의 취학 전</u> 아동을 말한다.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u>제1호에 따른</u> -----.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① ----- ----- <u>법 제12조</u> ----- ----- -----.
제16조(이용료 등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원 등록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략) 6. <u>세 자녀</u> 이상 가정: 100분의 50 7. (생략) ④ (생략)	제16조(이용료 등 및 감면) ①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두 자녀</u>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2023. 8. 8일부개정 2024. 2. 9.시행] 및 부산광역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3→2자녀) 추진에 따른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2023. 8. 16일부개정 2023. 10. 31.시행]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영유아 및 다자녀가정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영유아 정의 규정 정비 (제2조)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나.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가정 규정 정비 (제16조)

- 세 자녀 이상 가정 ⇒ 두 자녀 이상 가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람 중 3명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두되, 간사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주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계장이,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제2조의3 및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의4(중전의 제2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결정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경 또는 조정”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요”를 “중요”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88조</u>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u> --- ----- ----- -----.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u> 한다.	제2조(구성) ① ----- ----- ----- --- <u>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u>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중에서 호선한다.</u>	② ----- ----- ----- <u>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u>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 중 3명 이상</u>	2. ----- -- <u>사람</u>
④ 삭제	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u>두되, 간사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u>	⑤ ----- <u>두며,</u> <u>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계장이,</u> <u>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u> -----

주사가 된다.

⑥ 위원은 제4조에 따라 심의 결정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신 설>

제2조의2 (생 략)

제2조의3(회의)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

⑥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의3 (현행 제2조의2와 같음)

제2조의4(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전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 및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지명 등을 포함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 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기능) -----
----- 심의·의결한다.

1. -----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삭 제>

3. ----- 중요 -----

<삭 제>

<p><u>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u> <u>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u></p> <p><u>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u> <u>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u> <u>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u> <u>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u> <u>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u> <u>있다.</u></p>	<p><u>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u> <u>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u> <u>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u> <u>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u> <u>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u> <u>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u></p>
---	---

◆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정비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 인원, 부위원장, 간사 및 서기 등 정비 (제2조)

다.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제2조의2)

라.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서면심의 근거 신설 (제2조의4)

마. 위원회 기능 정비 (제4조~제5조)

바.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규정 정비 (제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취·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창출 지원 사업
2. 신중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사업
4. 신중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중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제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종합센터 등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제4조)

라.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재정지원 (제5조, 제6조, 제7조)

마.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

바. 시설의 위탁 및 홍보 (제9조, 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부
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
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무더위 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폭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재산
과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도시열섬현상 완화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예방 안전 교육 추진
7.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피해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 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지원 사업
4.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폭염을 피해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지정 시 홍수,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관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발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구민제안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온열질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음.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폭염 피해를 대비한 정책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제3조)
- 다. 종합대책 수립 및 폭염피해 예방사업 (제4조~제5조)
- 라. 무더위 쉼터 운영·지원 (제6조)
- 마. 폭염취약지역의 예찰·관리 활동 (제7조)
- 바. 교육 및 홍보, 관계부서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축 (제8조~제10조)
- 사. 구민제안 (제1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민 누구나 자살을 할 위험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
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자살
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체 상담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 구역 내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원 대상에 자살자의 유가족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관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제4조)
- 다.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자살 정보 관리체계 구축 (제5조~제6조)
-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 (제7조~제8조)
- 마.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제10조)
- 바.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자 지원 및 비밀누설 금지 (제11조~제1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2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8.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 제안이유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금연구역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금연구역 지정 의무시설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유소 및 석유제품 판매장소 금연구역 지정 신설 (제3조제1항제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제12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격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경우 공무원에게”로 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4.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및 공무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3조 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u>2년</u>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 ----- ----- <u>5년</u> ----- ----- ----- -----.
<신 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휴가) ① ~ ② (생략)	제13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 ----- ----- -----.
1. <u>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u> :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 <u>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u> :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 <u>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u> :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 <u>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u> :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p><u>3.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u></p> <p>④ (생 략)</p> <p>⑤ 의장은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u>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u></p> <p><u>4.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격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남녀 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경우 공무원에게--- ----- ----- ---</p>
---	--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정비 (제11조, 별표 3)
- 나.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제 근거 신설 (제12조의2)
- 다. 특별휴가 규정 정비 (제13조, 별표 4)
 -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 특별휴가 부여 근거 추가
 -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제12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사망시 장례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 ----- ----- ----- -----.
1. 육아·질병· <u>가사휴직</u> 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1. ----- <u>가족돌봄휴직</u>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 <u>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를</u> <u>포함한다)</u> -----	11.----- ----- <u>부모(배우자의 부모를</u> <u>포함한다)</u>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 본인 등에 대한 장제비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제3조제2항제1호)

- 가사휴직 ⇒ 가족돌봄휴직

나. 후생복지사업 중 장례 지원에 관한 규정 정비 (제6조제11호)

- 지급 대상 축소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지급 규정 삭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제12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내여비 지급범위(제4조 관련)

(단위 :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u>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u> <u><신 설></u>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 ----- ----- ----- ----- --<단서 삭제>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u><신 설></u>	

◆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제5조제2항)

나. 국내 여비 지급표 여비 일비 인상 (별표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제12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원의”를 “의원 등”으로, “보고”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운영총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등록”을 “등록(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계획”을 “계획(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책정 및 지원”을 “지원 및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책정”을 “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를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난이도, 연구단체의 의원수”로, “차등”을 “연구단체별로 차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호서식”을 “제6호서식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를 “연구활동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생략)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u>의원의</u>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② ----- <u>의원 등</u> ----- ----- ----- ----- <u>제출</u> ----- -----.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총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운영총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제6조(연구활동 기간) <u>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일 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u>	제6조(연구활동 기간) ① <u>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신 설>	② <u>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u>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1. 연구단체의 <u>등록</u> 및 취소에 관	1. ----- <u>등록(변경)</u> -----

한 사항	-----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u>계획</u> 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 <u>계획(변경)</u> -----
3. 연구활동비 <u>책정 및 지원</u> 에 관한 사항	3. ----- <u>지원 및 환수</u> -----
4.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사 및 의원정책개발비 <u>책정</u> 에 관한 사항	4. ----- <u>지원</u>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단체 지원) ①·② (생략)	제8조(연구단체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는 <u>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u>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u>차등</u> 지급할 수 있다.	③ ----- - <u>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난이도, 연구단체의 의원수</u> ----- ----- <u>연구단체별로 차등</u> -----.
제9조(<u>연구활동비의 지급</u>) 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9조(<u>연구활동비의 지급 등</u>) ① ----- ----- ----- ----- <u>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u>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의2(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	제9조의2(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
① 연구단체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의2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 ----- ----- 제출하 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① ----- ----- 제6호서식의 -- ----- 제출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 ----- .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 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취소) ① (생략)	제12조(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연구활동비 전 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활동기간, 연구활동비 지원 및 환수 등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강화하여 실효적인 연구단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운영총무위원회의 기능 강화 (제4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 나. 의원 임기 만료와 관련한 사항 신설 (제6조, 제11조)
- 다. 연구활동비 등 차등 지원 및 환수 규정 신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동
총 계	670	460(3)	17	47	146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계	667	458(3)	16	47	146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38	21	2	5	10
행정사무관	14	12	2		
의무사무관	3			3	
시설사무관	3	3			
행정·사회복지사무관	13	3			10
행정·시설사무관	1	1			
행정 보건식품위생 환경사무관	1	1			
행정 보건 간호 의료기술사무관	2			2	
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동
6급 소계		166	136	3	7	20
행정주사		85	74	3	1	7
세무주사		14	14			
사회복지주사		9	4			5
사서주사		1	1			
공업주사		1	1			
녹지주사		1	1			
전산주사		1	1			
방송통신주사		1	1			
환경주사		1	1			
시설주사		8	8			
행정·세무주사		7	4			3
행정·사회복지주사		18	13			5
행정·공업주사		2	2			
행정·보건주사		1	1			
행정·보건·식품위생주사		1	1			
행정·시설주사		3	3			
행정·방송통신 주사		1	1			
행정·해양수산·농업주사		1	1			
행정·공업·환경주사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		5			5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주사		1			1	
운전주사		2	2			
기계운영주사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동
7급 소계	178	119	10	13	36
행정주사보	74	53	7	1	13
세무주사보	7	7			
사회복지주사보	40	17			23
전산주사보	2	2			
사서주사보	4	4			
속기주사보	2		2		
공업주사보	4	4			
녹지주사보	2	2			
행정·수의·농업주사보	1	1			
해양수산주사보	1	1			
보건주사보	2	1		1	
식품위생주사보	2	2			
의료기술주사보	3			3	
약무주사보	1			1	
간호주사보	6			6	
환경주사보	2	2			
시설주사보	15	15			
방송통신주사보	3	3			
환경·보건·공업주사보	1	1			
운전주사보	5	3	1	1	
사무운영주사보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동
8급 소계		186	108(2)	1	16	61
행정서기		76	44(2)	1	1	30
세무서기		11	11			
사회복지서기		28	7			21
전산서기		4	4			
사서서기		3	3			
공업서기		9	8		1	
녹지서기		2	2			
해양수산서기		2	2			
보건서기		3	1		2	
식품위생서기		1	1			
의료기술서기		2			2	
간호서기		17			7	10
시설서기		18	18			
방송통신서기		1	1			
행정·보건서기		1			1	
행정·환경서기		1	1			
보건·간호서기		1			1	
환경·공업서기		1	1			
행정·방송통신서기		1	1			
운전서기		3	2		1	
방재안전서기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동
9급 소계		93	69(1)		5	19
행정서기보		57	43(1)		1	13
세무서기보		5	5			
사회복지서기보		6				6
사서서기보		5	5			
보건서기보		4			4	
식품위생서기보		1	1			
환경서기보		2	2			
시설서기보		6	6			
방송통신서기보		2	2			
방재안전서기보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2	2			
녹지서기보		1	1			
별정직 계		2	1	1		
5급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직(전문위원)		1		1		
7·8급상당 소계		1	1			
8급상당 별정직(비서요원)		1	1			

※ 비고 : 별정직 정원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 정원을 포함한다.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수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보건소	동
총 계	670	457(3)	17	47	149	총 계	670	460(3)	17	47	146
일반직계	667	455(3)	16	47	149	일반직계	667	458(3)	16	47	146
7급 소계	178	118	10	13	37	7급 소계	178	119	10	13	36
행정주사보	74	52	7	1	14	행정주사보	74	53	7	1	13
사회복지주사보	40	17			23	사회복지주사보	40	17			23
8급 소계	186	106(2)	1	16	63	8급 소계	186	108(2)	1	16	61
행정서기	76	45(2)	1	1	29	행정서기	76	44(2)	1	1	30
사회복지서기	28	4			24	사회복지서기	28	7			21
※ 비고 : 별정직 정원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 정원을 포함한다.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수임.						----- -----. ----- -----					

◆ 제안이유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개정 (별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시수수료가 다음”을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1조제4항 중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를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5 제1호 비고 1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4 가목 녹지 직렬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별표 18 VI. 다자녀출산공무원 우대의 가점항목란, 부여기준란, 배점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VI.자녀출산공무원 우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입양한 직원 ① 셋째 이상 출산 ② 둘째 출산 ③ 첫째 출산	1.0점 0.7점 0.4점	• 출산·입양일(개정 시행일 이후)을 기준으로 부여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가산점 부여 • 육아휴직일 경우 복직 후 신청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의 응시원서 작성요령 중 7. 수입증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같은 서식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의 응시원서 작성요령 중 6. 수입증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6조(응시수수료) ① (생략)	제6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u>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u>	② ----- <u>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 제2항의</u> ----- ----- ----- ----- --.
1. <u>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u> <u>는 과오납한 금액</u>	<삭 제>
2. <u>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u> <u>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u>	<삭 제>
3. <u>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u> <u>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u>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 설>

<신 설>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생략)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

위원회의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비 고

1. -----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2. ~ 7. (현행과 같음)

[별표 5의2]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생략)

비 고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 7. (생략)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5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생 략)
- 비 고
1. ~ 4. (생 략)
5. <신 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4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지	산림 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신 설>
		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 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 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 가공	
산림 보호	산림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신 설>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 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 관리	
		기능사: 산림	
산림 이용	산림	기술사: 산림	
		기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산림, 임산가공	
조경	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	<신 설>
		기사: 원예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 원예, 식물보호	
		기능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 보호, 조경, 산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5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생 략)
- 비 고
1. ~ 4. (생 략)
5.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4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가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나무 의사

--	--	-----	가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나무 의사

--	--	-----	가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나무 의사

[별표 18]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

(제26조제5항 관련)

가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VI.다자녀 출산 공무원 우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 ① 넷째 이상 출산 ② 셋째 출산 ③ 둘째 출산	1.0점 0.5점 0.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일(20.2.4. 이후)을 기준으로 부여 부부공무원 중 둘째 출산의 경우 희망 1인만 부여하고, 셋째 이상은 각각 가점 부여 복직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 (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응시원서 작성요령

1. ~ 6. (생략)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 (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응시원서 작성요령

1. ~ 5. (생략)

[별표 18]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

(제26조제5항 관련)

가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VI.재녀 ----- 출산, 입양한 ----- ----- -----	① 셋째 이상 출산 ② 둘째 출산 ③ 첫째 출산	1.0점 0.7점 0.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 입양일 (개정 시행일 이후)을 기준으로 부여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가산점 부여 육아휴직일 경우 복직 후 신청

[별지 제1호서식]

1. -----

응시원서

1. ~ 6. (생략)
7. -----

-----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

응시원서

1. ~ 5. (생략)

<div>6. 수입증지</div> <div>-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div> <div>「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div>	<div>6. -----</div> <div>- -----</div> <div>-----</div> <div>----- 지원대상자 -----</div> <div>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div> <div>-----</div> <div>-----</div>
---	--

◆ 제안이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점검위원회” 설치 등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자녀출산 공무원 실적 가산점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응시수수료 환급 및 면제 대상 확대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 나.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 시험위원 위촉 제한 (제11조)
- 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임용점검위원회” 설치 (제15조의2)
- 라.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별표 5, 별표 5의2)
- 마.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녹지직렬 나무의사 자격증 추가 (별표 7의4)
- 바. 출산장려를 위한 자녀출산 공무원 실적 가산점 확대 (별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마을박물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마을박물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마을박물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별표 2 평가항목점수표”를 “별표 2의 정기 주차차량 선정 평가항목 점수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

제14조 중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의 월 정기주차권 발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출입관리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주차 신청 및 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5조(정기주차 신청 및 대상선정 등) ①·② (생략)	제5조(정기주차 신청 및 대상선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주차 신청자가 주차면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u>별표 2 평가항목 점수표</u> 에 따라 고점자순으로 선정한다.	③ ----- ----- <u>별표 2의 정기주차차량 선정 평가항목 점수표</u> -----.
④ 정기주차 신청 및 배정기간은 <u>6개월</u> 단위로 하며 미선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 <u>1년</u> ----- -----.
⑤ 사용기간 내 신청 해지 등의 사유로 주차면이 빌 때는 우선순위 명단에 <u>의거</u> 배정한다.	⑤ ----- ----- ----- <u>따라</u> -----.
제6조 (주차요금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차와 정기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적용한다.	제6조 (주차요금의 경감)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

<p><u>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u></p> <p>7. ~ 9. (생 략)</p> <p>② (생 략)</p> <p>제14조(기록·관리) 관리자는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u>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u>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p>	<p><u>·양육 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u></p> <p>7.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기록·관리) ----- ----- <u>별지 제4호서식의 월 정기주차권 발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출입관리대장</u>----- -----.</p>
---	--

◆ 제안이유

우리 구 수영성마을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기주차 신청 및 배정기간 확대 (제5조제4항)

나. 인용 제명 현행화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5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규 제1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서”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여성가족부”를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을 “별지 제2호서식을”로 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7항 중 “위촉위원회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위촉위원회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통보 및 신고의무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생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다수의 사람이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2. 한 해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③ 구청장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으로써</u> 양성이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규정함으로써</u> -----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u>규정에</u>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3. (생략)	제2조(정의) ----- -----.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u>따른</u> 행위를 말한다. 2. 3. (현행과 같음)
제4조(고충상담창구) ①·② (생략) ③ <u>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u>	제4조(고충상담창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u>
제8조(고충상담) ①·② (생략) ③ <u>고충상담원은</u>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인 <u>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여성가족부 소속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u>	제8조(고충상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u> -----

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u>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u> 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충상담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 ----- ----- -- <u>별지 제2호서식</u> 을 ----- -----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략)	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u>구청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임명위원과 위촉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u>	⑤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⑥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 <u>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u>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 <u>위촉</u> <u>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 -----.
제14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u>구청장은</u>	제14조(통보 및 신고의무 등) ① <u>구청</u>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부산 시장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생한 사건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1. 다수의 사람이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2. 한 해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부산 광역시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생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다수의 사람이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2. 한 해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③ 구청장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2022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인 사건 발생 시 통보기관 추가 (제8조)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
- 나.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 (제11조)
- 다. 인용 제명 정비 (제12조)
- 라.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통보 및 신고의무 내용 추가 및 정비 (제14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